



민주주의 유린, NLL로 물타기

몸통을 그냥 뒤집 안 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파장이 급속히 커지며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검찰이 마치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의 도가니였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종북 좌파 야당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말씀"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온갖 지지 분한 글과 역겨운 악성 댓글을 달았다. 지금 조종동은 선거 개입 관련 글이 고작 수십 건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사기친다. 그러나 국정원이 글을 삭제하면서 실수로 남긴 것만 수십 건일 뿐이다. '국정원 악플'의 개수는 수만 건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국정원의 이런 범죄는 이미 지난해 대선 기간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대선 투표 직전에 "지지·비방 댓글이 없다"며 진실을 덮어 버렸다.

대선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 사건을 덮으려 했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내놓고 나서서 원세훈을 감싸며 검찰을 압박했다. 결국 검찰은 진실의 일부만 밝히며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뒤처리를 끝냈다.

그러나 어설픈 뒤처리 이후 의혹과 분노의 화살은 이제 원세훈·김용판 뒤에 있는 몸통을 향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 뒷면으로 이어짐



관련 기사 등이 실린

레프트21 107호를 구입해 보십시오.

<http://www.left21.com>

구입 문의: 02-777-2792 | 홈페이지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NLL로 물타기하려는 역겨운 짓거리 중단하라

지금 우파는 NLL로 국정원 범죄를 물타기하려고 광분해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 간에는 실제로 해상경계선이 확정된 적이 없다. NLL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사령부가 남한과 미군 함정들이 "이 선[NLL] 이북으로 항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된 것일 뿐이었다.

CIA조차 "북방한계선이 적어도 두 군데에서 확실히 북한 영토라고 추정되는 수역을 가로지른다"며 NLL을 남북 간 경계선으로 삼을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 인정한 적도 없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남한 지배자들은 그동안 NLL을 수호하겠다고 온갖 호전적 조처들을 해왔다. 북한 지배자들도 맞대응을 하면서 이 지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돼 버렸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고, 한반도 전체의 긴장도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NLL을 쟁점으로 삼아, 우파를 결집하려는 새누리당의 시도는 매우 역겹다. '종북 마녀사냥'을 통한 선거 개입 범죄를 또 다른 '종북 마녀사냥'으로 덮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도 한심하다. '그런 발언을 했을 리 없다'면서, 'NLL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보수적 입장인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우파의 마녀사냥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고, 서해상 남북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필요한 것은 근거도 없는 호전적 선동이 아니라, 서해상의 군비증강과 군사행위들을 중단시켜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방향이다.



국정원 범죄 덮기도 모자라 최루액까지 6월 23일 최루액을 맞고 괴로워하는 고등학생

국정원 — 부패 우파의 걸레이자 흥기

국가정보원(전신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이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12월에도 안기부는 북한 정보기관과 합작해 당시 야당 지도자 김대중의 낙선을 위한 음모를 꾸몄다. 안기부는 휴전선 부근에서 남쪽으로 총을 쏘 달라고 북한쪽 보안 기관원들에게 요청했다.

무엇보다 중앙정보부·안기부는 우

익·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했다. 각종 조작과 고문과 협박, 의문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1967년 동백림 사건, 1974년 인혁당 사건,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 등의 조작된 '간첩 사건'은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데 이용됐다. 이런 추악한 역사를 보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정원은 자본주의에서 소수 지배자들이 착취·억압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비밀 경찰의 본질을 보여 준다.

걸레를 빨거나 한 부분만 잘라낸다고 해서 수건으로 쓸 수 없다. '종북 마녀사냥'과 조작, 저항 운동 감시·탄압을 본업으로 하는 국정원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방향이 필요하다.

▶ 앞면에서 이어짐

이었던 권영세가 국정원, 경찰과 수시로 협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명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것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 사건을 "국정원과 경찰을 이용한 쿠데타, 권력 찬탈"로 규정했다.

이제 사람들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인권' 운운하던 박근혜의 표독스런 표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과연 국정원의 여론 조작과 경찰의 범죄 은폐가 없었어도 선거 결과가 이랬을까'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사태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위기 의식 속에 대학 총학생회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졌다. 표창원 교수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에는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아이돌 가수도 "행동하지 않으면 성과도 없다"며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언제나 뒷북만 쳐 온 믿지 못할 민주당도 뒤늦게 '장외투쟁'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한 분노는 민주당이 말하는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 박근혜 사과 정도로 가뭇질 수 없다.

정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온통 범죄공범들이 가득한 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문제가 바로 잡힐 리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는 시간 끌기와 물타기에 이용되곤 했다.

토 나오는

이번 사태는 반대자들을 탄압·사찰하고 '종북' 마녀사냥을 일삼는 국정원의 본질을 드러냈다. 또,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껌데기뿐이라는 점도 보여 줬다. 이 사회는 우리가 선출할 수 없는 재벌, 조중동 등 진정한 권력자들의 이해에 따라 움직여 왔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누군가를

선출할 수 있는 과정조차 기만과 협잡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다.

이런 더러운 범죄를 저지른 원세훈은 불구속되고, '살고 싶다'고 외치는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구속되는 게 이 사회의 '법과 질서'이다.

지금, 새누리당은 '노무현 NLL 발언'을 공개하며 역겨운 물타기와 우파 결집 시도에 나서고 있다. NLL 문제에서 거듭 우파적 안보 논리에 굴복해 온 민주당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박근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이런 토 나오는 행태는 우리를 더 열받게 한다.

'이명박근혜', 원세훈, 김용판 등 이 범죄의 관련자들은 모조리 사퇴하거나 구속·처벌받아야 하고 국정원은 해체돼야 마땅하다.

임기 초부터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 집권과 통치의 정

당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미 박근혜는 선거 때 약속을 뒤집는 것도 모자라, 공공부문 민영화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온갖 반동적 공격을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의 분노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온갖 반동적 정책과 노동자 공격에 맞선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조직된 노동운동 세력이 힘을 모아 이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그럴 때 지금 분노하고 있지만, 투쟁의 대안과 방향이 분명치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더 많이 거리로 끌어낼 수 있다. 그 점에서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철도노조가 25일부터 쏫불을 들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반갑다.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투쟁을 거리와 캠퍼스, 작업장 등 곳곳에서 확대할 때다.